



언론통제와 언론자유의 갈림길에 선 중국



글. 윤기홍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10년 만에 권력 교체한 중국...시진핑 체제의 언론정책 향방 주목

올해로 건국 64주년을 맞은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했다. 세계 주요 2개국(G2)의 자리에 오른 중국의 경제력과 엄청난 인구(공식인구 13억 5,000만 명) 등에 힘입어 언론 분야도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중국 대륙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약 2,000종에 달하고 있다. 하루 평균 신문 발행부수는 2억 부(연간 467억 부)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하루 발행부수가 100만 부를 넘는 중국 신문은 26개나 된다. 신문 발행부수 세계 100위 안에 든 중국 신문 수도 20개 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신문 대국'이다. 중국 신문사들은 세계 각국의 신문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료 부수와 광고의 감소 같은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중국은 TV·라디오의 보급 범위와 이용자 수에서도 세계 선두로 올라 섰다. 1949년 건국 당시 49개였던 라디오·TV 방송국은 2,150여 개(TV 방송국 213개)로 급증했다. TV 수상기 보유 대수는 5억 대(디지털 TV 수상기 약 1억 7,000만 대)에 달하고 있다. IPTV 이용자는 2,25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엔 디지털 방송이 전면 개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은 뉴미디어와의 융합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규모 또한 세계 수위다. 네티즌은 올해 6억 명에 다가설 전망이다. 한 해 한국의 전체 인구 수만큼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는 2009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여 만에 이용자가 3억 명을 훌쩍 넘었다. 웨이보는 정보 전파·획득과 여론 형성 면에서 전통 매체에 못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각광받고 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은 선보인 지 1년 만에 이용자 수가 한국 인구를 넘었다.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는 11억 2,200만 명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한다. 중국은 스마트폰 세계 최다 생산국가이자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명실공히 '미디어 대국'이 된 셈이다.

중국 언론의 해외 진출도 최근 본격화 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국력 상승에 걸맞은 '소프트파워'를 갖추기 위해 인민일보(人民日報), 중앙방송(CCTV), 신화통신(新華通訊) 등 3대 관영언론의 해외

진출 지원에 450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서방 언론에 맞서 자국의 시각과 입장을 전파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언론의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깔려 있다. 바로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중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아직도 언론검열·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 정부는 언론사의 시장화·경영자율화·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언론과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통 매체뿐 아니라 인터넷·SNS 매체에 대한 통제 수위도 높이고 있다. 언론의 취재와 편집, 보도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관례와 같은 언론검열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맞서 최근 들어 언론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올해 들어서는 새해 벽두부터 기자들이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반발해 집단파업을 하고 각계각층이 지지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항의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남방주말', 검열에 반기를 든다

올해 초 당국의 기사검열에 반기를 든 곳은 중국 남동부 광둥성 광저우에서 발간되는 진보 성향의 주간신문 '남방주말(南方周末)'이다. 중국 주간신문 중 발행부수(매주 120만 부)가 가장 많고 영향력이 가장 큰 신문이다.

중국 언론계와 인터넷, 홍콩·대만 매체 보도를 종합해 보면, 남방주말은 지난 1월 3일자 신년 특집호로 '중국의 꿈, 헌정(헌법에 의한 통치)의 꿈(中国梦, 宪政梦)'이란 제목으로 신년 사설을 작성했다. 이 사설은 애초 헌법이 보호되어야 인민이 비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최종 신년 사설 제목과 본문은 공산당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사설 제목은 시진핑 신임 국가주석 겸 총서기가 지난해 말 행한 연설 내용에서 따온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꿈에 다가가 있다'로 수정됐다.

남방주말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광둥성 선전부의 튀전 부장이 다섯 차례 이상 수정 지시를 내려 비판적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전직 기자들도 튀전 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가세했다. 광둥성 선전부는 다른 언론사와 행정기관에 남방주말 사태를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통제에 나섰다. 이는 남방주말 쪽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기자들은 파업을 단행했다.

남방주말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과 대학생, 교수, 인권운동가, 작가, 유명 배우들은 남방주말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온라인 상에서 지지 성명을 냈다.

중국 당국이 관례처럼 해 오던 기사검열에 맞서 기자들이 집단 파업에 나서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지 시위를 하고 성명까지 내면서 호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시진핑이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물려받은 이후 중국 유력 매체가 당국의 언론검열 관행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중국 내 차기 6세대 지도자 후보군 선두에 있는 후춘화 광둥성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중재에 나섰다. 후 서기의 중재로 광둥성 공산당위원회는 선전부의 사전 기사검열을 없애며 파업 기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기자들도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파업을 이틀 만에 끝내고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남방주말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유력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으로 이어졌다.

남방주말 파업사태가 터지자 공산당 중앙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월 7일자에 남방주말 기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전국 주요 언론사에 이 환구시보 사설을 신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유력 일간지인 신경보(新京報)를 비롯해 후난성 창사에서 발간되는 소상신보(潇湘晨报) 등 여러 신문들이 당국의 환구시보 사설 게재 압력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보 쪽은 사장과 편집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거부했다. 하지만 베이징시 공산당 선전부의 폐간

위협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다만 신경보는 환구시보 사실을 신문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최하단에 게재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했다.

남방주말은 2008년 3월 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티베트족의 대규모 시위 배경을 전했다가 주필이 면직되는 일을 겪었다. 2009년 11월에는 중국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인터뷰에 성공하는 대형 특종을 거뒀으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8일 중국 방문 중 인민일보·신화통신·CCTV 등 3대 관영 매체를 빼고 남방주말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미국 쪽은 진보적 매체인 남방주말을 선택함으로써 중국 언론자유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당국은 남방주말의 인터뷰 원고를 사전 검열했다.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1면과 인터넷판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 남방주말은 검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신문 1면과 인터뷰 기사가 실린 2면의 절반을 광고로 메웠다. 오바마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던 주필은 이후 인사 조치됐다.

검열 관행은 개선되지 않아

남방주말 파업 사태 이후에도 당국의 언론통제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됐다. 당국이 남방주말 사태 뒤 사전 검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통제와 검열 관행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남방주말 사태가 발생한 시기인 1월 4일, 유력 역사전문 월간지인 옌황춘추(炎黃春秋)의 인터넷 사이트가

'남방주말'을 비롯한 중국의 각종 신문



갑자기 차단됐다. 연황춘추가 '헌법은 정치체제 개혁의 공감대 인식'이라는 제목의 1월 신년호 사설에서 정치 개혁을 촉구한 내용이 문제가 돼 당국에 의해 웹사이트가 일시 폐쇄된 것이었다.

3월 초 열린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보도 검열이 강화됐다. 특히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 10년 만에 교체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의 지도부가 공식 선출돼 언론통제가 부쩍 심해졌다.

남방주말 기사검열과 파업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튀전 광둥성 선전부장은 또 다시 보도 통제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튀전 부장이 양회 개막을 앞두고 광둥성 지역 언론사에 광둥성의 경제사회발전 성과를 중점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현지 기자들이 공개했다.

청두일보신문그룹이 쓰촨성 청두시에서 발행해온 역사전문 월간지 간역사(看历史, 2010년 '국가역사'에서 이름을 바꿈)의 경우 2, 3월호 배포가 중단됐다. 1월 25일 편집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웨이보를 통해 "운영 회사의 이유로 제작을 마친 2월 호가 나올 수 없게 되고 3월호도 제작이 중단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당국이 편집에 개입하고 편집장을 임의로 교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4일 지린성 창춘시에서는 차량 절도범이 차 안에 혼자 있던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째인 6일부터 후속 보도가 크게 줄었다. 유족과 국민들은 경찰이 창춘 시내에 설치된 많은 감시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도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영아가 숨졌다고 비난했고, 이에 당국이 후속 보도 금지를 지시한 결과였다.

중국 정부가 2008년 3월 티베트족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이후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티베트인 분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도 통제 수위가 매우 높다. 당국은 관영 언론들조차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영 신화통신에게만 간략하게 보도하게 하고 있다. 다른 매체들에게는 신화통신 기사만 인용해 보도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다른 매체들이 자체 취재하거나 신화통신 기사와 다른 내용은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 매체도 언론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의 언론통제와 검열은 외국 매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2년 전 중동발 '중국판 재스민 시위'와 지난해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사건 등을 거치면서 외신 기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는 십여 명의 주중 외신 기자를 불러, 가택 연금 중 탈출한 시카징웨이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사건 보도에서 관련 중국 법규를 어긴 데 대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아랍권 최대의 위성 뉴스 방송인 알자지라(Al Jazeera)의 베이징 특파원(중국계 미국인)을 추방했다. 중국 정부가 정식 등록된 외국 기자를 추방한 것은 국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1998년 독일과 일본 기자를 추방한 이후 14년 만이었다. 알자지라는 중국 당국이 후임자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아 베이징 영어 채널 지국을 폐쇄하게 됐다. 주중 외신기자클럽은 중국 관리들이 알자지라가 2011년 가을 방영한 중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왔다고 밝혔다.

이러 미국의 세계적 경제 통신사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해 6월 29일 당시 시진핑 국가부주석 일가의 재산 내역을 담은 문서를 입수해 심층 보도했다. 그 뒤 블룸버그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는 중국에서 한달 이상 접속이 안됐다.

최근 화두는 온라인

중국 당국이 요즘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온라인이다. 중국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확산되면서 정보 흐름과 여론 형성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이른바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웨이보는 당정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가장 먼저 폭로하는 장이 됐다. 전통 매체들이 보도를 외면하거나 놓치는 소식들도 웨이보에 오르고 있다. 웨이보로 대변되는 온라인이 공산당 정부의 언론통제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된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웹사이트 차단과 폐쇄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의 흐름을 봉쇄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또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외국 SNS를 차단하는 동시에 웨이보 만을 허용하고, 지난해 3월부터 '웨이보 실명제' 시행에 나섰다. 당국은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바이두, 웨이보 서비스업체인 시나·팅션·소후 등으로 하여금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민감한 콘텐츠를 삭제·차단토록 지시했다.

지난해 3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해임 처리를 둘러싸고 중국 내 정변설·내란설이 퍼졌을 때, 정부는 소문의 근원지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일부 웹사이트들을 폐쇄했다. 그리고 시나와 텅션이 운영하는 웨이보 사이트에서 댓글 달기 기능을 사흘 동안 중단시켰다.

이를 위해 당국은 검열 실무자들을 이들 업체에 파견해 놓고 있다. 동시에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이버 담당 경찰을 두고 네티즌 동태와 콘텐츠를 감시하고 있다. 민감하고 비판적인 정보의 흐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중국의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은 웨이보 등 온라인 상에서 특정 사건과 유사한 단어나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당국의 검열 시스템을 피하고 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중국 당국의 특정 인터넷 사이트 차단과 검열에 맞서 가상사설망(VPN) 등을 써서 우회 접속하고 있다. 네티즌과 당국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구글은 2010년 초 자사 메일(gmail)에 대한 중국발 해킹 공격과 중국 당국의 검열 요구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구글은 검색 서버를 홍콩으로 옮기고 중국 대륙 검색 시장에서 철수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13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중국을 바레인·베트남·시리아·이란과 함께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체계적인 온라인 감시를 하는 국가로 꼽았다.

'공산당 중앙선전부', 언론통제를 주도하는 기관

그렇다면 중국에서 언론통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어떨까. 바로 공산당 중앙선전부다. 공산당의 선전과 언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홍콩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개혁파 자오쯔양과 후야오방 전 총서기 시절 당 간부를 지낸 일부 인사들은 그 동안 온라인에 공개한 서신에서 언론출판 자유를 요구하면서 보도를 검열하는 기관으로 공산당 중앙선전부를 지목했다. 이들은 중앙선전부를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중앙선전부 안에서는 1990년대부터 '열평조(阅评组)'가 언론검열과 통제를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 등의 보도에 따르면, 퇴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열평조는 매체들을 평가·감독하는 '뉴스열평'이라는 활동을 통해 언론통제 조치에 관여해 왔다. 그 동안 많은 신문과 주간지·월간지의 정간, 간부·기자 해직, 사이트 폐쇄 조치 등의 배후에는 열평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내 언론 정책 실무 담당 기관을 보면,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신문·정기간행물·출판물·온라인게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수립 업무를 맡아 왔다.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은 라디오·TV·영화 분야를 관리해 왔다. 인터넷 분야의 관리는 2년 전 설립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담하고 있다. 국무원은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를 맞아 정부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전총국을 통합해 국가신문출판광교영화방송총국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년 동안 당 선전담당 책임자였던 리창춘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당시 공산당 공식 권력서열 5위)은 언론통제의 사령탑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향후 중국의 언론통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인물은 최근까지 10년 동안 중앙선전부 부장을 지낸 류원산 신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제서기)이다. 신화통신 기자 출신인 류 상무위원은 1993년 중앙선전부 부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20년 동안 선전부를 이끌면서 언론통제와 검열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류 상무위원은 올 초 남방주말 기자 파업사태에 대해 중앙선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류 상무위원이 3월 리창춘 전 상무위원에 이어 선전담당 책임자에 오르게 되면서 앞으로 언론통제 수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유력
역사전문 월간지인
연황춘주의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4일
갑자기 차단됐다.





중국 국가통신사인
신화통신의
웹사이트 신화망

시진핑 체제, 희망은 오는가

이런 가운데 올 3월 10년만의 중국 지도부 권력교체와 함께 시진핑 지도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의 언론 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남방주말과 신경보 사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의 출범 이후 중국에서 처음으로 불거진 언론검열 항의사태다. 게다가 당국의 언론검열과 탄압에 다른 매체와 지식인, 시민들까지 동참해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를 두고 공산당 정부의 언론통제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국의 기사검열에 반발해 일어난 언론사 기자들의 파업 사태가 이례적으로 대화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의 유력 언론이 당국의 통제에 맞서 공개 집단파업을 벌인 끝에 전례 없는 '양보'를 얻어냈다.

지난해 10월 중순 시진핑이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직에 오르기 전 발생했던 언론검열 항의 사태들에 대한 처리 방법과는 크게 달랐다. 남방주말 사태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언론검열과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언론자유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언론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율성 보장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신문 정책 책임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족색'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지방신문의 취재영역 제한' 조치

를 풀 가능성을 비쳤다. 류빈지에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은 지난 3월 6일 양회 기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일부 지방 정부가 관할지역 언론사 기자의 타 지역 취재를 금지하고 있는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기자의 타 지역 취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공 기관이나 공직자는 기자의 정상적 취재를 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내 언론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도부가 남방주말 사태 등에서 일시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양보를 했을 뿐 언론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거나 언론통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많다.

공산당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언론은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목구멍과 혀' 즉, '대변자'이다>라는 언론관을 견지하면서 언론을 통해 사상과 여론을 지속적으로 통제해 나갈 전망이다. 언론통제를 완화할 경우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공산당 지배체제를 반대하는 시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공산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는 남방주말 사태 이후 중앙선전부가 공산당의 언론통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선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중앙선전부는 남방주말 파업을 비판하면서 사회안정과 당의 영도를 위한 언론검열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류원산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은 지난 3월 2일 열린 전국 선전부장 회의에서 언론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언론통제를 수행하라는 뜻을 단호하게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이 언론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방법도 '합리적'인 형태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난 1월 광둥성 선전부는 남방주말 쪽과 가진 협상에서 기사를 직접 삭제하거나 고치지 않고 선전 당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주말 쪽도 파업 직후 펴낸 신문에서 당이 어느 정도 언론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규제 방법은 시대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방주말 기자들은 파업 전 낸 성명서에서 당이 제시한 원칙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기사 삭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5세대 지도부가 관례처럼 굳어진 언론통제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언론의 자율권을 서서히 보장하면서 언론자유를 일부 허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